



##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 7월의 폭염 속에서 진행된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

- = 의성군연합회 등 의성농민, 7월 27일 대규모 FTA 저지 집회 개최 =
- = 여야 정책위의장, 한-칠레 FTA를 정기국회 때 논의하기로 합의 =
- = 조배숙, 강봉균 의원 서명운동 동참. 총 147명의 국회의원 서명 완료 =
- = 국책연구기관들, FTA정책토론회서 한-칠레 FTA 비준 필요성 강변 =
- = 노 대통령, "FTA 추진기구 필요, 제2의 농업구조조정 추진" 발언 =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는 7월 21일 한-칠레 FTA 저지를 위한 8일간의 대표자 단식농성을 해 단하고, 향후 정부의 추이를 예의주시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번 단식 농성 과정에서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은 김인호 한여농 회장의 탈진 등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7월 및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한-칠레 FTA 비준을 저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농민연대는 7월 16일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 비준을 추진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전국농민연대의 대표자 단식 농성에 이어서 한농연의성군연합회(회장 홍병기) 및 지역 내 농민단체들이 참여한 의성농민연대는 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의성역 광장 앞에서 약 5천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칠레 FTA 폐기를 위한 의성농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같은 400만 농민들의 투쟁은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움직임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조배숙·강봉균 의원이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서명을 완료하여 총 147명의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7월 30일 오후 회합을 가지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 문제를 9월 정기국회 이후에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칠레 FTA 국회비준 문제는, 9월 초 멕시코 칸쿤의 WTO 제5차 각료회의와 국정감사 이후 한농연의 "11. 19 범국민대회" 기간을 전후로 농업계 내외부의 핵심 사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의 한-칠레 FTA 저지 투쟁에 대응한 정부 및 재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7월 23일 정부는 민주당 및 개혁국민정당 소속 23인의 국회의원의 소개로 {FTA이행특별법(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하였다. 특히 이번 법안 제출과정에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을 포함하여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무려 7명이나 참여함으로써, 400만 농민들은 또다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박주선(전남 화순·보성) 의원은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및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에게 "FTA이행특

별법 공동발의자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하지만 한 인터넷언론은 국회사무처 직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박주선 의원의 공동발의자 탈퇴 선언은 국회법상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8월 1일에는 한농연 등 농민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채, “FTA정책토론회”가 서울 시내 고급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표적인 반농업 보수언론인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GDP 2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경제 개방으로 국가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한-칠레 FTA 비준 등 FTA 확대정책이 시급하다”고 강변하였다.

7월 28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2차 농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FT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라”는 주문 뒤에 급조·추진된 이 토론회에 대한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400만 농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농업개방론자만이 참여한 FTA 정책토론회는 명백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 경북 안동으로 최종 확정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가 경북 안동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농연은 7월 24일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유력 후보지였던 전북 고창·전남 광양·경북 안동 등 3개 지역에 대한 사전 답사 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투표를 실시하였다. 3개 지역의 치열한 유치 경쟁 결과,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개최지로 선정된 안동시연합회 및 경상북도연합회 임직원 및 회원들은 12만 농업경영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내실 있는 전국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였다.

### 서정의 중앙회장 등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 8·15 남북공동행사 참석

= 서정의 중앙회장, 북한 농근맹 대표와 실무회의 가져 =

= 남북 농민대표들, 올 가을 중 남북농민통일대회 개최기로 합의 =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 김인호 한여농 회장을 포함한 전국농민연대 소속 농민단체 대표 및 실무자 14명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에 남측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했다.

농민대표들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했다. 또한 15일에는 평양 능라도공원에서 열린 8·15 민족대회에 참석하였다. 한편 서정의 중앙회장 등



▲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식 장면.

전국농민연대 대표들은 15일 오후 북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위원장 현상섭)과 실무회의를 갖고, 올 가을에 남북 농민이 참가하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연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농민통일대회는 남과 북의 농민들의 분단 이후 첫 만남이라는 의의와 농민들이 통일의 주체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2003년 통일대회는 전국농민연대 차원의 행사로 확대되면서 남북 농민의 자주적 교류활동을 통해 민족농업을 지키고 통

일농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북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의 방북을 강력히 희망해 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서정의 회장의 방북은, 통일농업 및 남북한 통일농업시대를 위한 남북 농업교류에 적극 노력한다는 한농연의 강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개소식 가져

= 이현목 초대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 마련 =

= 생산농민을 대변하는 농정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집단이 될 것을 다짐 =

한농연중앙연합회는 8월 29일(금)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현목(전 농협 감사위원장) 초대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소의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는 400만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농정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집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계획되었다. 아울러 국내 농업의 축소 등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려는 생산 농민들의 노력을 통해 개소를 맞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는, 400만 농민과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민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농정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개소식에서 이현목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농연 산하연합회 소식

### 전남도 및 나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어려움에 직면

= 전남도의회, “학교급식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 전북 교육위원회, 전북도 학교급식조례안 통과시켜 =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회장 이복흠) 등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해 온 전남도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및 나주시의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주시는 7월 16일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런데 전남도청은 이에 대해 8월 11일, “나주시의 학교급식조례는 WTO 규정에 위반되고,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만을 쓰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외산 농산물을 국산물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전남도청이 내세우는 이유였다.

이에 나주시는, “WTO 협정에도 농촌빈민들의 식량지원 등이 가능토록 돼 있고, 미국도 자국산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 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급식비 지원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전남도청의 저자세를 비판했다.

이번 전남도청의 재의결 요구는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 등이 참여한 ‘학교급식 개혁과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한 전남운동본부’가 도민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전남도에 청구한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하여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7회 전남농업경영인대회에서 전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 문제는 중요한 지역 농정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복흠 전남도연합회장 및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한결같이 “우수한 지역 농축산물의 학교급식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 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농축산물의 소비처 개척에도 도움이 되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단 전남도 및 나주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 뒤, WTO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다. 도청에서 주저한다면 도의회가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전북도 교육위원회는 8월 20일 교육위원 임시회의 본회의를 열어, 전북 학교급식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북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전남도의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을 계기로 각 지자체로 들 불처럼 번지고 있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얻어낸 최초의 가시적 성과여서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 그밖의 농업계 소식

### 2004년 농림예산 8조 715억원, 올해보다도 7.4% 줄어

정부가 내년도 농림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편성하고, 주요 사업 예산요구액을 삭감하거나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농림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어 결정될 경우, 참여정부가 공약했던 '농림예산의 국가예산 대비 10% 이상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농정불신을 더욱 깊게 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사업성 예산은 올해에 비해 15%나 축소되었고, 채무상환용 예산만 6.5% 늘어났다. 그리하여 향후 사업성 예산의 추가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농정 추진은 엄청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농림예산 규모는 당초 농림부가 참여정부 농정공약 실천을 위해 예산당국에 요구한 11조원에서 무려 3조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일례로 농가부채 경감 관련 예산은 4,050억원을 요구했으나 절반 수준인 2,000여억원만 반영되었으며, 120개 미국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550억원을 요청했으나 반영액은 단 4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영이양직불제와 친환경축산직불제 예산 반영액은 요구액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와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 전국농민연대, WTO 제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멕시코 칸쿤으로 출발

한농연을 비롯한 전국농민연대 참가단체 대표 및 임·직원 70여명은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WTO 제5차 각료회의' 감시 및 저지투쟁을 위해 9월 7일 멕시코 현지로 출발했다.

전국농민연대는 각료회의 동향을 현지에서 파악하며 사안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을 하며, 미국과 EU에 의해 주요사안들이 일괄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저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전국농민연대는 현지 농민단체 및 국제 사회운동단체들과도 연대하여 국제연대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농연은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대욱 한농연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과 각 도연합회 임원 등 17명이 합류하여 활동하며, 우리 농업의 어려운 실정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도 자체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한농연**